

환



소

식

경

계



환경부,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된다. 환경부는 유독물 등 유해 화학물질 분류 및 용기·포장 표시규격에 국제 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를 도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나라마다, 국내의 경우는 부처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됨으로써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간결하고 알기 쉬운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이 현행 7개에서 16개, 건강·환경 유해성이 현행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할 제품정보,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고시된 유독물은 향후 3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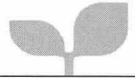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마련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1500여종 유독물 각각에 대한 세부 분류 및 표시 사항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유독물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홍보와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인체 안전기준이 없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7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석면노출로 인한 국민 전반의 건강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석면이 우리나라에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도입·사



용 되고,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석면이 국민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은 1979부터 2001년까지 석면 관련 사망자가 4만여명에 달하며, 미국은 '악성 중피종'으로 지난 1975년부터 매년 2,5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만 여명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석면 관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하여 석면의 원천적 차단, 공공건물, 학교 등 민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주요 석면관련 시설의 피해 및 건강영향조사, 전문인력·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립 등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국내최초 전국 하천 생태계 센서스 실시

앞으로는 이화학적 수질 뿐 아니라 하천의 생태계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되고, 이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 환경부)」 및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2007.3, 환경부)」의 일환으로 전국 하천에 대한 수생태 건강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생태 건강성 조사는 금년에 전국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매 5년 단위의 전국조사, 매년 주요 지점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하천구역안의 생물상, 생물서식 환경, 수변식생 등 하천영향권의

모든 생태계를 조사하게 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대로 된 하천 생태계 자료가 파악되어 내실있는 수질보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결과는 훼손된 하천의 복원 로드맵 마련과 수생태계 평가 관리체계 구축, 하천생태지도(또는 파노라마 영상) 제작 및 대국민 제공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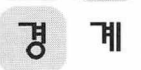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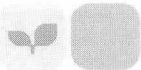
한편, 환경부는 2006.9월 수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 수립, 2007년 3월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 수립,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구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공포 등 하천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정부, 한·미 FTA 환경분야 추가협약의 결과

정부는 지난 6월 29일 한·미 양국간 2차례의 추가협약의 끝에 환경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FTA에 7개 국제환경협약(MEA)의 이행의무를 추가하고 의무 위반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완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 불가 ▲환경 chapter의 의무 위반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정부는 이번 추가협약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역확대와 투자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줄이고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반분쟁해결절차 도입으로 인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친환경상품 사용으로 온실가스 15만 4000톤 감축

환경마크나 GR마크가 달린 친환경상품을 선택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7일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해 실시한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판매된 '친환경 전기·전자제품으로 줄어든 온실가스는 15만4000톤으로 2만7772명이 연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배출하는 양과 동일했다. 이는 수도권 천연가스버스 도입사업을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양이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친환경상품 구매의 경제 편익은 약 540억원이었다. 평균 5년이라는 내구연한을 감안한 경제 편익은 약 245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 판매된 친환경상품의 세 배 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2005년 판매된 친환경상품으로 줄어든 온실가스는 9305명의 연간 배출량과 비슷했으며 경제 편익은 173억3700만원 정도였다. 내구연한을 감안한 경제 편익 역시 3배 정도 적은 795억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2006년 한해 동안 판매된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친환경상품이라고 가정한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막대했다.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약 31만명이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았다. 잠재적 경제 편익 효과는 4800억원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 개선 효과와 경제 편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정책을 펼쳐왔다. 전체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구매력이 전체 시장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 큰 편이다.

정부는 친환경상품 수요층을 민간으로 더욱 확대하기 위해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및 '종교계 친환경상품 애용 확산 선포식' 등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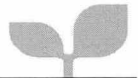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개정에 따라 유통매장 내 친환경상품 매장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 상태다.

지난 28일 정부는 전경련회관에서 (주)신세계, (주)삼성테스코 등 30여개 유통업체 대표이사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체 친환경상품 유통촉진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친환경상품을 소개하고 스스로 친환경상품의 소비자가 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통업체가 친환경상품 및 매장 운영정보를 교환하는 등 친환경상품의 민간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상품이 확산되면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외항만 개발 국제물류펀드 조성



해외 항만개발, 물류센터 조성, 물류기업 인수 등 국제 물류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국제물류투자펀드가 올 하반기까지 1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강무현 해양부 장관과 강정원 국민은행장, 장병구 수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4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펀드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펀드에 일부자본을 출자하고, 펀드자본의 안정적인 투자 및 운용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 발굴, 투자대상국과의 협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 은행은 물류펀드 출자기관을 대표하는 출자주간사로서 원활한 펀드설립을 위해 투자자모집, 펀드 주요조건 확정, 펀드등록 등 물류펀드 설립관련 절차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물류투자펀드는 국민은행과 수협은행이 공동주간사로 참여해 국내 은행권,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로 자금을 모집하게 되며, 해외 항만개발 및 인수·운영, 해외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

물류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게 된다.

펀드는 총 1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민간자본은 총 1조원~1조2천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국가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공사, 컨공단 등 물류관련 공기업과 함께 총 3000억원~50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번 사모펀드 조성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우리 항만과 연계한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펀드설립에 앞서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를 위해 지난 3월 비상설 협의기구인 '국제물류투자협의체'가 발족해 현재 국내 물류기업, 건설사, 금융기관 및 물류 관련 협회 등 총 97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전 세계 해외 유망 물류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실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투자정보 제공, 타당성 조사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물류투자펀드로 금융기관은 국내 SOC에 대한 투융자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해외 물류사업에 대한 투융자 기회를 확보하게 되고, 물류기업은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었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R)